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15일 목포시 삼학도에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목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화합·평화정신 잇자

'대통합 한마당' 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개관식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15일 목포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평화정신과 '용서와 화해, 국민화합'의 정치철학을 기리는 '국민대통합'의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오후 목포시 삼학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 특설무대에 서 열린 기념관 개관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정종득 목포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여야 정치권·靑·정부인사 등 3000여명 참석
이정현 수석도... '차대통령' '화합 행보' 눈길



15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이희호 여사, 박종연 전남지사(왼쪽부터)가 기념테이프를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자 '대변인'으로 통하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개관식에 직접 참가한 것은 물론 기념관 설립 발기인으로까지 이름을 올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유신정권의 최대 피해자였던 김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이자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민주당 고문이 지난 1999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명예회장과 부회장으로 참여해 물심양면으로 도운

건립돼 감개무량하다"며 "기념관에는 '행동하는 양심·화해·용서' 남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각각 현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 삼학도에 들어선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1만5600㎡ 부지에 건물 면적 4677㎡, 지상 2층, 높이 14.1m 규모로 200억원(국비 100억·도비 40억·시비 60억원)이 투입됐다. '평화의 나라,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한 기념관은 전시동과 컨벤션동으로 구분된다. 전시동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부터 국민의 정부, 노벨평화상 수상 등 대통령의 일대기가 전시된 제1~4 전시실, 영상이나 사진이 마려도 국제회의나 특별기획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유품은 노벨평화상 기념메달·학적부·연설문·육종 서신·생활 소품 등 총 4830여 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뉴스 초점 민주 '독한 혁신안' 민심 잡을까?

중앙당사 10분의 1로 줄여 여의도 이전 당직자 150→100명 감축 시·도당 파견

의원들 기득권 내려놓기 빠져 호응 미지수

민주당이 중앙당 슬림화를 기본으로 한 구조조정안을 발표, 흔들리는 민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당 당직자 수(현 150명)를 정당법이 정하는 범위(100명) 이내로 슬림화하겠다"면서 "이제까지 관행적 편법 운영으로 비대해져 있는 중앙당을 정상화하겠다"고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앙당 집중 상태를 분권화해 중앙당과 당 지도부가 독점해온 권력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다"는 뜻에서 영등포당사를 오는 8월까지 폐쇄하고 10분의 1 수준의 규모로 축소,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며 "국고 보조금을 하루루 쓰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중앙당에서 줄어드는 인원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

구원으로 배치, 연구원에 정책전략실을 부활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를 지역정책협력관 형태로 시·도당에 내려보내 정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앙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적인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본격 준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중앙당 인력을 100명 이내로 줄이더라도 17명 정도는 시·도당 사무처장 지원요원으로 파견해 실제 중앙당은 80여명 수준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당내 일각의 반발도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또 1400명 규모의 현 당사의 10분의 1 수준(140명 이내)으로 여의도에 새 당사를 물색, 당사에는 대인업무 등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

고 나머지는 국회 내 공간을 재조형해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도 내놓기로 했다. 대표 비서실장실을 대표실로 쓸 것"이라며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소의 인사 및 조직·재정을 독립시키는 등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혁신안 발표에 대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에 따른 쇄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에는 의원 기득권 포기 내용은 빠져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김 대표는 "중앙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골자로, 독한 혁신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혁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김용관 '직권 남용'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개입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대선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게시글은 73개이며 선거 관련 글에 달린 찬반 투표는 1280여개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또 지난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전직 직원 김씨와 직인 정씨, 서울경찰청 박모 팀장 등 총 5명이다. /연합뉴스

北, 美에 고위급 회담 전격 제안

비핵화 의지 피력... 장소·일시 등 美에 일임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 대담회에서 북미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조(북)·미 양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북한)의 대법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함께 만들어요!

4대악 없는 안전한 세상

- 하나 따뜻한 관심으로 성폭력 예방해요
- 둘 폭력 없는 학교생활 함께 만들어요
- 셋 가정폭력, 집안일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 넷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만들어요

성폭력 1366 학교폭력 117 가정폭력 112 불량식품 1399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